모두가 안전한 국가,
다함께 잘사는 지역

2019. 3. 11.



행 정 안 전 부
경찰청 · 소방청

목 차

Ⅰ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····· 1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····· 3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 ····· 5

□1 2019년 역점 추진과제 ····· 5

①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 ····· 5

②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····· 8

③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····· 12

□2 쟁점과제 ····· 15

④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

□3 신규 발굴과제 ····· 18

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····· 20

Ⅰ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1 획기적 자치·재정분권으로 분권국가 실현 노력

○ (**자치분권**) 30년만의 「**지방자치법**」 **전부개정안*** 발표 및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「**지방이양일괄법**」 **제정안** 국회 제출**

* (지방자치법) 주민조례발안제 도입,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

** (이양일괄법) 571개 사무의 획기적 이양을 위한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일괄 개정 추진

○ (**재정분권**) **추가적 조세 부담없이** 지역의 자율성·책임성을 제고하고,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**재정분권 추진방안** 확정

- 지방소비세율 10%p 인상(1단계: 8.4조원), 소방안전교부세율 25%p 인상(0.5조원) 등

* (1단계/'20년까지) 국세:지방세 74:26 → (2단계/'22년까지) 국세:지방세 70: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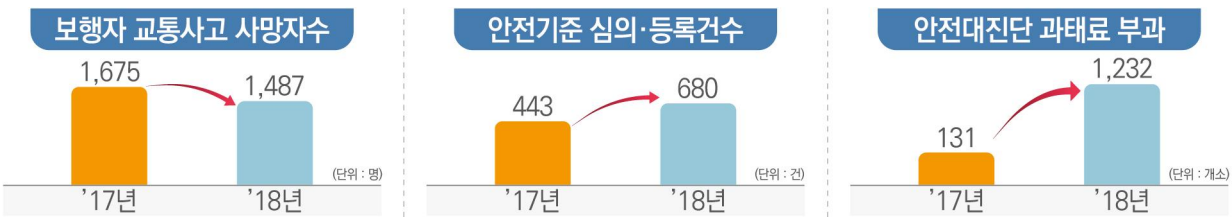
○ (**지역경제 활성화**) '**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***' 및 **지방규제해소** 성과 창출**

* '18년 청년일자리 사업(831억원, 1만명),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사업(367억원, 1.2만명)

**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전년대비 3배 해소('17년: 72건 → '18년: 261건)

☞ 자치·재정분권으로 확대된 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에 상응한 **실질적 권한·기능과 계획된 2단계 재정 확충** 필요성 지속 제기

2 안전사고 감축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



○ (**안전사고 대폭 감소**) 여성·어린이 등 **안전취약계층 보호** 강화로 안전사고 감소*, 산업·경제적 규제완화와 별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**제도의 선제적 정비****

* 여성대상 범죄건수 감소율('18, 전년대비) : 성폭력 2.5%, 불법촬영 8.3%

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('18, 전년대비) : 보행자 11.2%, 노인 4.8%, 어린이 37%

** 총 53건 안전규제 개선(폐지·완화규제 재강화 10, 규제 신설 18, 미흡 규제 강화 25)

○ (**국민체감 재난관리**) 읍·면·동 단위까지 **특별재난지역 확대** 선포* 및 **폭염·한파**를 **법적 재난**에 **포함**하여 대응**

* 특별재난지역 개선 이후 읍·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3회 선포, 국고 160억원 추가지원

**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일시경감, 피해자 소급지원(사망 시 1천만원)

○ (**안전관리 강화**) **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및 점검결과 공개** 등 「**국가안전대진단**」 강화 실시*, 재난안전 **R&D 투자 확대****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

* 과태료 부과 '17년 131곳 → '18년 1,232개소(9배↑), 일평균 안전신문고 신고 28.1%↑

** (재난안전 R&D 예산) '17년 302억원 → '18년 437억원(+45%)

☞ 안전규제·기준 정비 및 안전점검 제도 강화에도 불구, **신종·복합 재난**으로 인해 **국민 불안감 지속**

3 정부·사회혁신의 기반 조성 및 속도감 있는 확산 노력

○ (**열린 정부혁신**) **'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*'** 등 국민소통 상설화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**공공정보·데이터 개방**** **확대**

- **상향식 정부혁신**체계(정부혁신추진협의회·국민포럼) 구축('18.10.)

* (열린소통포럼) 정책제안 72건 발굴, 40개 과제 소관부처 정책 반영 추진

** (데이터 개방) ('13) 5,272개 → ('17) 24,588개 → ('18.12) 28,541개

-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ODB(Open Data Barometer) 평가 세계 4위, 효과성 분야 1위 달성

○ (**현장중심 행정**) **현장민생공무원 충원** 및 기존인력의 **현장중심 재배치**

* (소방) 나홀로 소방대 감소 : '16년 57개 → '18.12월 0개(△57개)
(특수교사)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 감소 : '16년 2,440명 → '18.6월 1,853명(△587명)

○ (**주민주도 지역혁신**) **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** 성공사례* 다수 창출과 **'실패박람회**'**'를 통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·응원 분위기 조성

* (전주 '선미촌')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경력단절여성 자활지원혁신공간 등으로 탈바꿈
(목포 '괜찮아 마을') 유휴상가 등을 활용, 타지역 청년들의 취·창업 및 정착 지원

** (실패박람회) 5만명 방문(상담 2천여건), 98만명 온라인시청, Daum 실시간 검색어 1위

☞ 정부·사회혁신 제도적 **기반 마련**은 **진전**된 반면, 주민참여의 실질화 및 **국민이 체감**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 구현 요구 계속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❑ **(지방자치) 자치분권 요구(2단계 재정분권 등)는 지속되고 있으나, 지방의 책임성 확보, 지역 간 격차 등 과제 상존**

○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·기능 확대와 **계획된 2단계 재정 확충 요구**가 지속되고, **정책 全 과정**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 확대

○ 그러나 **지방자치단체의 역량·책임성**에 대한 국민들의 **신뢰수준을 제고**하고, 지역 간 격차와 지방소멸 위기 심화**에 적극 대응할 필요

* 국민들의 신뢰수준 : 지방의원(34%) / 단체장(42.2%) < 시민단체(48.9%) 順(지방행정연구원, '18.9.)

** '13년 7월, 228개 시·군·구 중 75개(33%) → '18.6월 89개(39%) 소멸 위험(한국고용정보원)

❑ **(국민안전) 재난의 불확실성 증대, 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승**

○ 시설노후·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의 **대형·복잡화**

* (예) 종로고시원 화재, 아현동 KT 화재, '18년 폭염 등

○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, 국민의 요구수준 지속 증대

*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권 설문조사(중앙일보, 9월)에서 '**안전권**'은 **생명권**에 이어 2순위(38.8%)

❑ **(정부운영) 4차산업 혁명, 저출산 · 고령화 등 정부의 행정환경 급변**

○ 열린 정부, 지능형 정부 등 4차산업 혁명에 걸맞은 정부혁신과 복잡다기한 **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 중심의 해결 노력** 필요

❑ **(사회환경) 사회적 갈등 표출, 포용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**

○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, 인권과 공공질서의 충돌, 소외·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의 과제 당면

* OECD '더 나은 삶의 질 지수(Better Life Index)' 중 '공동체 연대성' 38개국 중 38위 기록('17년)

2 추진방향

목표

“모두가 안전한 국가, 다함께 잘사는 지역”

정책 방향

분권과 균형발전	국민안전
▸ 지방분권 수준 한 단계 도약	▸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
▸ 자치단체 역량·책임성 제고	▸ 사고유형별 맞춤형 관리
▸ 규제혁신 및 일자리 창출	▸ 대형화재 예방 철저
	▸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·문화
	▸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

이행 기반

정부혁신	사회통합
▸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진	▸ 과거와의 화해 및 미래로의 도약
▸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정부 구현	▸ 인권과 공공질서의 공존
▸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도약	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2019년 역점 추진과제

1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

◇ 자치분권 관계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가시적 성과 창출, 주민참여와 지방행정 혁신, 정보공개 등을 통한 자치단체 책임성 확보 병행

(1) 대한민국 지방분권 수준의 한 단계 도약

* 국 : 국정과제

□ **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**

자치분권 관계법령의 조속한 입법으로 **자치분권의 실질적 도약**

| 지방자치법 | 전부개정	▲주민의 권리 명확화 ▲직접 참여제도 개선 ▲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
| 주민조례발안법 | (제정)	▲주민이 조례(안)을 의회에 직접 제출, 청구요건 완화, 심의·의결기간 규정
**| 주민투표법	·	주민소환법 |** 개정	▲주민투표·소환 청구요건 완화·확정요건 도입, 주민투표대상 확대
| 지방이양일괄법 | (제정)	▲571개 사무(66개법률) 이양,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사무 원칙

○ 지방이양 필요사무 지속 발굴과 명확한 사무배분을 통한 **책임자치 구현**

- 법령 제·개정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**'자치분권 사전협의제'** 도입
- 자치단체 **조직·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***로 사무이양의 완결성 제고

* 광역단체 실·국 설치 자율범위 확대, 기초단체 기구설치 탄력성 강화

중앙-지방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**'중앙지방협력회의'** 도입 추진

□ **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지방재정 혁신**

국세-지방세 7: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

* 지방세 확충 등 국세-지방세 구조 개편 및 추가 기능이양 대응

• **(일정)** 논의기구 설치('19.3.), 2단계 방안 논의 및 확정('19.12.)

교부세 산정방식 개선,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*으로 **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**

* 지방소비세 6%p 추가 인상과 출연규모 및 자치단체 출연율 조정 추진

○ 확충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**지방재정제도 계획성** 제고

* 교부세 통보(12→9월), 예산편성지침 시달(7→6월) 등 예산 일정 조정, 잉여금 관리 강화 등

□ **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'광역단위 자치경찰제' 도입**

국 경찰청·행안부·자치분권위 등 협력, **'자치경찰제' 입법 추진**

※ 경찰법 전부개정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」

○ 입법화 후 **서울·제주·세종 등 5개 지역 시범실시**

• **(일정)** 자치경찰 법안 국회통과('19.), 자치경찰제 시범실시('19. 하반기)

(2) 자치단체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

□ **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**

○ **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지방의회 심의 의무 강화*** 및 **컨설팅·지원** 확대

* 1년 이내 주민조례안 의결 의무화, 의원임기 만료시 차기에 한해 계속 심사

○ **지역맞춤형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직장인 참여 활성화**

- **주민자치회**에 직장인이 **자유롭게 참여**토록 **'공가(公暇)*' 활성화**(민-관 협업)

* 주민자치회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'공(公)의 직무'에 해당. 다만, 유급여부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 명시 필요

○ 주민투표 대상 확대,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 **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**

□ **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분권모델로 지역역량 극대화**

○ 광역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**특별지방자치단체** 활성화, 자치단체별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등 **지역 맞춤형 분권모델 구현**

○ **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**에 행정적 명칭(**특례시**) 부여, 추가 특례 확대 촉진*

- 향후, 인구로 획일화된 대도시 기준 개선 등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검토

* 전략적 특례도시(지역거점도시 등) 지정·육성을 위한 특례발굴 등

□ **지방자치의 책임성 확보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**

주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**지방 행·재정정보의 상시 공개 확대***

-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등 공개대상 확대, 단체별 업무추진비·국외여비 등 비교공개

* 지방의원 국외연수결과, 겸직현황 등 공개, 「지방재정365」 이용자 접근성·편의성 제고

○ 주민대표로서 **지방의회**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**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**

- **지방의회는 '윤리특별위원회' 의무설치**로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

(3) 지역규제 혁신 및 지역 일자리 창출

□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밀착형 ·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

○ **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·확산**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견인

◈ 기업의 고용·투자·시장출시 저해 규제를 발굴하여 **네거티브 방식 적용 등 해소 지원**
◈ 지자체에 **규제혁신 3종 세트**(임시허가, 신속확인, 실증특례) 내용 및 절차 **공유 확산**

○ **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별* 핵심규제 개선**으로 포용국가 지원

(유형1) 지역 숙원사업, 생활 SOC 사업,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혁신성장
(유형2) 지방공공기관 규제 혁신, (유형3) 유휴부지 및 접경지역 규제해소 등 포용사회 실천

○ **'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'** 활성화*로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 제고

* (운영) '18년 207개 → '19년 243개 / (현장방문) '18년 854회 → '19년 1,200회

□ 지역에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

○ **적극적 지방재정** 운용을 통한 **지역일자리 창출** 등 **지역경제 활력** 제고

- 일자리·SOC 등 **신속집행 강화**(상반기 58.5%) 및 **확장적 1회 추경(약 12조원)*** 추진

* 4월까지 총 12조원('18년 7.7조원 대비 약 57% 증가) 목표

○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정착을 위한 **'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*' 확대**

- **지역일자리 모델 신규 발굴, 행·재정적 지원**을 통한 확산 유도

* '18년 1만명(831억원) → '19년 2.6만명(2,086억원) /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, 전문가 컨설팅 등

국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**고향사랑기부제, 지역사랑상품권*** 등 도입·확대

* 「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」 제정 및 모바일상품권 시범사업 실시('19.2월~)

□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 추진

○ **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위기** 대응을 위한 **체계적 지원기반*** **마련**

*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법적지원근거 마련, 인구감소지역 역량강화 추진

○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**문화·체육·복지 및 생활안전** 인프라 확충

-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주민제안형 **생활SOC 추진**

○ 접경지역 생태·안보자원 등을 활용한 **新성장동력 발굴** 및 **지역특화발전*** 추진

* 통일을 여는 길, 평화누리길, 한탄강 주상절리길, **영종-신도 평화도로** 등

○ **'섬의 날(8.8)' 제정**을 계기로 '지속가능한 섬' 조성을 위한 **「섬 발전 대책」 추진**

2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

◇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과 국민의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, 지진, 폭염, 기반시설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·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표

(1)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

□ **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정비**

국 **중대본**(행안부), **중수본**(각 부처), **구조기관**(소방·해경)간 **역할 재정립**

- 중대본은 총괄·조정, **중수본**은 **소관 재난유형·시설**에 대한 **대응·수습***

* (예 : 병원 화재) 소방청긴급구조·구급활동 집중, 복지부사후수습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담

○ **위기징후 경보제 운영**을 통한 사고 유형별(49개) 위기징후 감시·평가 강화

○ **신속한 기능 복구에만 초점**을 맞추었던 **위기관리 매뉴얼**을 사고 피해자(예 : KTX 승객, 휴대폰·신용카드 이용업소 등) **보호조치도 포함하도록 개편**

□ **재난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상황관리 및 정보전달체계 개선**

○ 대응기관이 실시간 공동 활용하는 **GIS 기반 문제해결형 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**

※ 기상상황, 교통정보, CCTV 위험상황 등 종합정보 실시간 공유

○ 5G·UHD 등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대국민 **재난 예·경보 플랫폼* 개발**

* 다중매체(휴대폰, DMB, 전광판 등)를 통한 지역·상황별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 체계

□ **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적 · 물적 기반 강화**

'소방공무원 국가직化'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소방관 처우 개선

- '22년까지 **2만명 충원 및 국립소방연구원·소방복합치유센터** 건립 추진

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사업 강화* 및 지자체 **방재안전직렬 충원**

* 전문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지원, 채용기반 강화

경찰·소방·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**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본격화**

- **17개 시·도** 단계적 구축(~'20년) 및 **응용서비스* 개발**

*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에 재난망과 연계된 센서 부착으로 실시간 점검체계 운용

(2)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

□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확립

○ 체계적인 사회재난 관리를 위한 **'지역위험성평가'** 및 **'사회재난 예방계획'** 도입

※ 범정부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「(가칭)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
○ **원인자 책임 명문화,** 장례·치료비 지원근거마련 등 **사회재난 복구체계** 확립

○ **국가기반시설** 대상(現273개소) **추가 지정** 및 기준정비*, 시설별 **안전기준**** **개선**

* 분류기준 체계적 정비: 국가기반시설(행안부)·중요시설(국방부)·보안시설(국정원)

** △500m미만 통신구 스프링클러 설치 △철도 사고 승객보호 매뉴얼 개선 △안전인력 확보 등

□ 폭염·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 대응

○ **그늘막 확대,** 무더위쉼터 야간개방 등 **「범정부 폭염 종합대책」**(~'19.2월) 수립

○ 겨울철 **대책기간(11.15.~3.15.) 운영, 제설 취약구간 집중관리**로 피해 최소화

○ **대규모 풍수해** 대비, **생활권 중심**의 부처합동 **정비사업*** 추진

* (현행) 행안·국토·환경부 단위사업 → (개선) **범정부** 종합정비 대책마련 및 추진

□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

국 **민간 건물**의 **내진보강 촉진**을 위한 **'지진안전 인증제*'** 본격 시행

* 내진성능평가(건축주) → 지진안전시설물 인증(행안부), 소요비용 일부 국비 지원

전국 **활성단층 지도 제작** 추진, 명확한 활성단층은 **대국민** 우선 **공개**('19년~)

○ 지진 **옥외대피장소**(10,139개소) **관리** 및 **위험평가시설 안전조치**(정밀진단 등) **법제화**

(3) 대형화재 예방에 국가역량 집중

□ 화재취약시설 및 안전약자 집중 관리

다중이용시설 등 **취약시설** 중심 **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**(38만개동) 실시

○ 고시원·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**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*** **설치** 확대

* 기존건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(1,504개소), 건물 내 경계벽에 방화성능(벽돌 등) 재질 설치 등

○ **'의식주+안(衣食住+安)'**을 브랜드로 **소방안전교육**의 **평생 교육화**

- 거동불편자 수용시설(요양병원 등)은 **대피 중심**의 맞춤형 **훈련·교육** 강화

□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

○ **대형화재** 근본적 **차단**을 위한 **'100년대계 화재안전 마스터플랜'** 수립('19.하반기)

※ 최근 10년간 화재분석, 건축물별 위험성, 고위험 취약시설 등 화재취약요인 현미경 검증

○ **소방시설 설치 기준**을 건물이 아닌 **사람중심**의 (가칭)**인명안전기준*** 개발, 개선 추진

* **(이용자)** 인원·인지능력·피난능력, **(위험성)** 건물형태·가연물, **(이용특성)** 수면여부 등

○ **대형·특수화재**시 **주·정차 차량 견인 장비** 등 **민간 인프라*** 적극 **활용**

※ 민간전문가(위험물, 화학 등) 인력풀 운영 및 특수장비(견인차, 사다리차 등) 동원 협약 체결

(4)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와 문화 정착

□ 국민 안전권 시대를 뒷받침하는 안전정책 추진

국 안전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「(가칭)**안전기본법**」(안) **마련**

모두가 **동등한 안전권**을 누릴 수 있도록 **취약계층 안전대책 강화**

※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(570개소), 노인 교통안전시설(78개소) 신규 확충 등

○ 全부처 **안전규제·기준*** 점검 및 **제도 정비**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

* 주거용 가스·전기설비, 다중이용업소 안전설비(비상구·피난로·소방시설) 등

□ 국가안전대진단 종합 개선 및 안전부패 척결

○ **위험시설 DB 구축**을 통한 **점검 이력관리** 및 **대국민 결과 공개** 추진

- 국민생활 밀접시설, 사회기반시설 등 14만 개소 합동점검(2.18.~4.19.)
- 점검자 책임성 강화, 시기별 취약시설 사전대비, 다중이용시설 '자율점검표' 게시

○ **'안전분야 부패'** 척결을 위한 **범정부적 안전감시 체계*** **확대·운영**

*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(13개 부처, 17개 시·도) 운영 및 공기업(30개) 참여 추진

□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·문화 확산

생애주기별 안전교육기관 지정(100개소, ~'22년), **'국민안전체험관'** 건립(7개소, ~'21년)

- 완강기·소화기 사용법, 지진대피 등 **체험 위주 교육** 실시

○ **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** 대책 중심으로 **안전문화 운동** 붐(Boom) 조성

※ 주·정차 절대금지구간 제도도입 및 범칙금 상향, 안전보안관 공익신고 활동 활성화 등

○ **도심제한속도 하향, 음주운전 처벌 강화*** ('19.6.시행) 등 **교통안전 정책 강화**

*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(3년 이하→5년 이하 징역), 단속기준 강화(0.05→0.03%), 행정처분 강화(2회 시 취소)

□ **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**

○ **「태극연습**(한국군 단독)**」과 연계**한 새로운 형태의 **「을지태극연습*」 실시**

* 포괄안보 개념의 범국가적 대형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

국 **생활 속 재난**에 **대비**한 전국단위 **주민참여 민방위 훈련 확대** (연 4회)

○ 전국 도로 **전광판* 활용** 등 다양한 **민방위 경보 전파체계** 구축·운용

* 기존 경보사이렌, 라디오, TV 등의 매체 이외에 공공·민간 전광판(14,000여대) 활용

○ **대테러** 활동 강화를 위한 **취약시설 점검**,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

(5)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

□ **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치안안전망 확충**

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**학대·실종 예방**정책 **내실화**

△장기결석·미취학아동 소재확인 △노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(5천대) △장애인보호시설 방문교육

○ **웹하드 카르텔** 등 불법촬영물 유통 **집중단속** 및 불법촬영 취약지역 **상시점검**

청소년 비행·범죄 예방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·사후관리 강화

* 위기청소년 관리대상 확대, 학교·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, 유관기관(교육부·여가부) 정보공유 등

□ **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강화**

지역맞춤형 **환경디자인**을 통한 주민 **범죄불안요소 제거(CPTED)**



주민이 원하는 시간·장소에 **'탄력순찰'** 실시, 주민에게 이행 **결과 제공**

○ 시민단체 참여 **범죄예방협의체*** 운영, 치안정책에 **주민의견 반영** 확대

* 매분기 경찰관서별 회의 개최, 지역 내 범죄·사고요인 정보 공유 및 협업 방안 논의

□ **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 엄단**

○ **조직폭력*, 주취폭력, 의료진 폭행, 상인갈취 등** 생활주변폭력 **강력 단속**

* 기업형 조폭행위 단속, 범죄수익 '기소전 몰수보전' 등 운영자금 차단

○ **강·절도 집중 검거기간 운영**('19.4~6), 보이스피싱 특별단속(年 2회) 실시

○ 채용비리 등 **'9대 생활적폐' 집중 단속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**

3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

◇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,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에 대한 신뢰 제고

(1)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진

□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공공서비스 혁신

○ 범정부 차원의 **중점개선 분야**를 선정, 공공서비스 **사각지대 해소** 추진

-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, 행정·민원제도 개선 등

※ 19년 중점분야 : 아동보호(결식, 안전, 학대 등), 학교 밖 청소년, 독거노인 등

○ 사회복지, 간호 등 **현장 인력 확충** 및 각종 **공공서비스 연계*** **제공 확대**

- 지역 단위에서 주민관점의 다양한 공모사업 등으로 서비스 효과성 제고

* 「공공서비스 연계 강화」 공모사업, 공공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사업(국토-복지부) 등

□ 국민의 일상 속으로 혁신성과 확산

○ 공공구매조달 혁신 등 **6대 역점과제**를 통한 **성과창출형 정부혁신*** 추진

* 정부운영기반 혁신, 기관 간·기관 내 협업 강화,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 등

○ **'정부혁신 박람회**('19.하)' 개최, **'실패박람회*'** 정부 브랜드화 등

* 실패경험 공유, 맞춤형·재도전 지원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도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

국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**지역혁신프로그램 전국 확산**

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	국민이 소통·토론·숙의하는 혁신거점 공간 조성	('19년 예산) **82억**
주민주도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	유휴 저활용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	('19년 예산) **87억**
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	국민 아이디어 활용, 지역사회 소규모 문제 해결 선도	('19년 예산) **90억**

*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**'지역혁신포럼'** 전국 확산

□ 적극적 공직사회를 위한 현장감수성 및 역량 제고

○ **현장감수성·공감능력**을 겸비한 공무원 양성 및 **적극행정** 활성화

- 공무원 대상 **사회적 가치 교육** 확대, **적극행정 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**

○ **상시적 혁신과제 발굴**을 위한 **토론** 및 **학습 활성화**

- **'정부혁신 대토론회'** 개최('19.11.), **'혁신현장 이어달리기*'** 등

* 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 등 분야별 월 1회 추진, 우수사례 발표 및 혁신공무원 포상 병행

(2)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정부 구현

□ 정책 전 과정을 국민이 주도하도록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 확대

국 국민이 직접 **정책대안을 제시**하는 **'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'** 상설 운영

- **'찾아가는 열린소통포럼'** 확대, **세종**청사에도 **'열린소통포럼'** 개소

○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* 운영으로 **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**

* 정부 정책이슈 분석·토론, 부처·자치단체별 참여사이트 통합안내 등

□ 적극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 관리

○ **국민생활 접점 국가공무원 충원**('19년, 1.8만명)으로 **양질의 공공서비스** 제공

- **대국민서비스 개선** 등 국민이 충원효과를 **체감**하도록 **성과관리** 강화

○ **생활 접점의 조직·인력 운영을 국민이 직접 진단**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

* 현장방문 → 국민참여 심화토론 → 전문가검토 후 개선 사항을 조직설계·업무계획에 반영

○ 긴급현안 적시 대응,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**긴급대응반***·벤처형조직** 운영

*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해당부처가 즉각 대응토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 부여

** 드론·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미래형 조직

□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 · 데이터 · 자원 개방 · 공유

○ **공공데이터·공공시설 개방***으로 **혁신성장 지원**

- 전수조사 통해 파악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

* 공공데이터 개방 : ('18년) 28천개 → (~'21년) 14만여개(43만건 보유데이터의 34%)

- 공공**시설·물품**을 **국민과 다른 기관**들이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* 확대

* 공공시설·자원을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예약·결제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

○ 업무추진비, 해외출장경비 집행내역 등 **국민관심정보 공개 확대**

- 예산집행의 '중점 공개분야'를 선정, **상세 공개기준 표준화** 및 **일괄 공개**

※ (예시)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실·국장까지 확대,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공개

□ 국민 중심의 정부운영 지원 기능 강화

○ 행안부·과기정통부의 차질없는 **세종시 이전**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사 보안

- 세종-서울 간 **영상회의 활성화**로 불필요한 출장 및 회의문화 개선

○ 기록물폐기중지 도입,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보완 등 **국가 기록관리체계 혁신**

(3)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도약

□ 공공주도에서 민간서비스 활용으로 전자정부 패러다임 전환

○ **민간의 창의적 기술·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접목**하는 **민·관 협력형** 전자정부 추진

- 민간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추진방식 전면 전환

○ AI를 접목한 **지능형 전자정부 본격 추진**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

-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시범서비스(지능형 국민비서, 민원상담365, AI정책자문관) 설계

○ Digital-9* 등 **전자정부 선도국 교류·협력 확대**로 전자정부 글로벌 위상 강화

- AI, 블록체인 등 공공서비스 적용사례 공유를 통해 첨단기술 수용성 제고

* Digital-9 : 한국, 영국, 에스토니아, 뉴질랜드, 이스라엘, 캐나다, 우루과이, 포르투갈, 멕시코

□ 빅데이터와 신기술에 기반한 공공행정 혁신

○ 인공지능·빅데이터를 활용, **「정부24」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**으로 육성

- **각종 구비서류 온라인 발급·제출·공동이용** 및 원스톱신청* 서비스 확대

* 2종(출산(영·유아)·상속(노년)) 서비스 → 아동·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단계적 확대



○ 장소,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의 **지능형 오피스 구현**

* 외부에서 문서 작성이 가능한 웹-오피스, 음성회의록 시스템 등

□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국민 최적점 모색

○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**개인정보보호 체계* 개편**

* 행안위·방통위의 보호 기능 전부, 금융위의 일부(일반상거래 기업조사·처분권) 이관

○ 공공·문화·보건 등 **국민생활 밀접분야 중점점검**으로 침해사고 적극 예방

- 개인정보 노출 경보시스템 고도화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강화

2 쟁점과제

4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

◇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, 여전히 숨어있는 인권침해요소 제거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통합실현

(1) 과거와의 화해 및 미래로의 도약

□ 추진 배경

○ 2019년은 **3·1운동**과 **대한민국임시정부** 수립 **100주년이 되는 해로,** 기념사업 추진을 통한 **독립정신 계승**과 **역사적 자긍심 고양** 필요

○ **역대정부**(김대중~박근혜 정부)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속에서 **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** 등 **부분적인 성과**를 거두었으나,

- 개별 사건별 **피해자 및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** 과거사 **문제해결** 및 후속조치(배·보상, 통합재단설립 등)에 대한 사회적 **요구** 지속

☑ 그간의 경과

- **(과거사 문제해결)** 진실·화해위원회 활동재개, 배·보상 및 재단 설립의무 등을 규정한 **'「과거사정리법」 개정안' 여·야간 이견**으로 1년 넘게 국회 **행안위 계류중**
- **(3·1운동 100주년)** '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' 설치·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및 **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착수**('18.2.6.~), 총 3차례의 전체회의 개최(~'18.12.)

□ 정책 추진방향

【3·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기념사업 추진】

○ 3·1운동과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는 **과거 100년 기념사업*** 추진

* 국민화합형 기념식,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, 독립유공자 발굴·선양, 국외독립유공자 초청 등

○ **미래 100년 준비사업*** 병행으로 **평화와 번영의**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

* 남북공동행사, 100주년 기념 평화공원 조성, 미래 전망 학술대회 등

○ **연중 관심**이 **지속**되도록 **프로그램*** 구성, **「3·1절 중앙기념식」** 성공적 개최

△ 핵심기념행사 참여사업(~4월) △ 6·10항쟁·광복절 행사(5~8월) → △ 미래비전수립 등(~12월)

[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해결]

국 **'진실화해위' 활동 재개,** 「과거사정리법」 개정으로 포괄적 진실규명 기반 마련

○ **'제주 4·3사건' 희생자·유족 추가 심의·결정 및** '5·18민주화운동' 진상규명 대응

○ **'부마민주항쟁' 진상규명 재개,** 40주년 기념식 개최 지원

○ **舊남영동 대공분실**을 **민주인권기념관**으로 조성, **시민사회**에 **환원**

[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국민상처 치유를 위한 유해봉환]

○ **태평양전쟁 격전지(타라와)**까지 강제동원 희생자 **유해봉환 범위 확대**

- 기존 '군인·군무원' 위주에서 '노무자' 유해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전환

○ **유해봉환 로드맵**(정부+민간) 작성 및 「유해봉환 유관기관 협의회*」 운영

* 외교부,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등 참여

(2) 인권과 공공질서의 공존 강화

□ 추진 배경

○ 밀양송전탑 사례('14.6.25.) 등 **행정대집행** 과정에서의 **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**와 동시에 **국민 안전 확보**를 위한 **대집행 필요성** 증가

- **'인권 보호'**와 **'대집행 실행력 확보'**가 동시에 담보될 수 있도록 **「행정대집행법」 전부개정** 필요

○ 기업인원 집단폭행, 대법원장 인화물질 투척 사건 등 법질서 훼손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**엄정한 법집행**에 대한 **국민 요구** 증가

- **경찰권을 적정하게 행사**하면서 각종 불법·위험으로부터 **국민**을 **안전하게 보호**할 수 있도록 **법·제도적 개선방안** 마련·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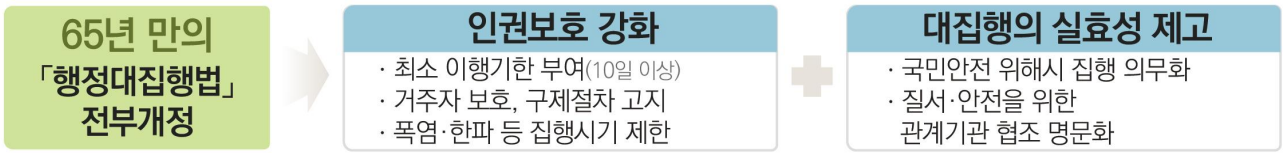
☑ 그간의 경과

- **(행정대집행법)** 「행정대집행법」 전부개정안 **법제처 심사**(~'19.2월, 국회제출('19.3월))
- **(법질서 확립)** '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 확립대책' **경찰위원회 심의·의결**('18.12.17.)

□ 정책 추진방향

[행정대집행 과정상 국민 인권보호 강화]

○ 국민의 **권리 보호**와 **「행정대집행법」 실행력 확보**를 위한 **전부개정**



[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민주 · 인권의 경찰상 구현]

경찰위원회 실질화*를 통한 경찰권에 대한 **민주적 통제 장치** 강화

* 보고요구권·보고의무 신설, 심의·의결 권한 및 회의개최 확대(월1→2회), 안건심의 인력·예산 지원

○ **경·검 간 견제와 균형**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**「형사소송법」 개정** 추진(~'19년)

수사상 **인권보호·공정성 확보** 방안 **전국시행 및 '인권영향평가제'** 확대

- **(인권)** 심야조사요건 강화, 자기변호노트확대,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조성
- **(공정성)** 서면수사지휘원칙 확립, 진술녹음제도 확대, 경찰·국과수 합동 감정실 구축

[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 확립대책 추진]

○ **집단 폭력행위**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**엄정한 법집행**

- **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, 불법행위는 현장**에서 **적극적으로 제지**

※ △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태세 확립 △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 등

○ 적극적인 **법집행**을 위한 **법령·장비·훈련 시스템 개선*** 추진

- **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**으로 현장 법집행의 적정성 확보

△경직법 개정 △손실보상 기준 마련 △신체보호장비 개선 △대응 훈련 강화 등

3 신규 발굴 과제

5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

◇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,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여 일상 속 포용의 가치 확산

(1) 세심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

□ **언제나, 어디서나, 찾기 전에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확산**

○ **챗봇 기반**의 24시간, **'언제나'** 멈춤 없는 **범정부 민원상담 365**체계 단계적 구축

※ 여권업무, 차량등록 안내 등 국민 상담이 많고 표준화된 업무부터 적용

○ 일과시간 내,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 해소 위한 **'어디서나' 서비스 확대**

※ 예)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재발급 등을 **전국 읍면동 주민센터**에서 신청 가능, 경찰서 내 통합민원센터(36개서) 설치로 원스톱 처리민원 확대(21→40종)

○ 행정서비스를 **몰라서 못 받는** 일 없도록, **'찾기 전에' 선제적 안내**

※ 예) 병원에서 임신 진단 시, 임신 지원서비스(출산진료비, 영양제 지원 등) 안내

□ **사생활 보호형 매듭없는**(seamless) **서비스 제공**

○ 「정부24」 앱에 **전자문서지갑*** 기능을 탑재, 공문서 **제출 편의 제고**

* 발급한 민원서류를 개인용 전자문서지갑에 보관, 종이문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

○ **전입신고 시** 주소지변경 외의 기존 서비스(전기요금 할인 등) **자동 이전·연계**

○ **사생활 보호**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**계부, 계모**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

□ **누구에게나 더 빨리, 더 많이, 더 쉽게 재난안전정보 제공**

○ **'차량 대피 신속 알림시스템*'**으로 하천둔치차량의 침수 위험을 **'더 빨리'** 안내

- **결빙구간** 및 **고속도로 추돌사고 방지**를 위한 **전방 도로상황** 실시간 **음성안내**

* ('13~'17년) 하천둔치 주차차량 침수피해 435건 → ('18년) 위험통보, 통제 등 행정조치로 침수피해 0건 → ('19년) 제도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

○ **긴급재난문자 용량 확대**(90자→157자)로 **재난별 행동요령**까지 **'더 많이'** 안내

○ **외국어 재난문자 수신체계** 구축으로 외국인에 대해 **'더 쉽게'** 정보 제공

(2) 소외계층·안전약자 등을 맞춤 배려하는 체감 서비스

□ 소외계층을 위한 관용차량 공동이용

○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**관용차량**을 저소득층에 **무상대여하는 '행복 카쉐어'**

- PC·**스마트폰**으로 관용차량 무상 대여·공유 신청에서 반납까지 **대면접촉 없이 이용**



행복카쉐어

□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각지대 해소

○ 학교·직장 위주의 안전교육 탈피, 노인·다문화가족·장애인 등 안전약자와 보호자(가족, 활동보조인) 대상으로 **찾아가는 맞춤 교육** 제공

- 경로당·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생활(화재, 낙상)·교통(보행, 승하차)·범죄(보이스피싱 등) 등의 **체험형 교육 실시**

○ **장애 유형별*** **취약 특성을 고려**한 재난대응매뉴얼 개발·보급 확대

* 뇌병변, 청각, 언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뇌전증 장애인 등

□ 누락 없고 신속한 재난구호

○ 재난 피해자에 **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**을 위해 「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」을 활용, 재난 피해자 **주 생계수단***을 실시간 확인토록 연계

* 총 수입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(농·어·임·염생산업 등)에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(현재는 세무서 등에 공문으로 확인 필요)

○ 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등 지원 시 **누락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국가재난관리시스템**에 이재민 등록부가 **자동 생성***되도록 개선

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정보를 현장에서 직원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실시간 등록

○ 실종자·해상 조난자 **수색구조용 드론*** **및 위치추적 손목밴드**** 개발

* (드론) 산악, 해안가, 절벽, 하천, 고공건물, 늪지대 수색 시 활용

** (손목밴드) 위치·심전도 등을 알려주어 이를 활용한 수색·구조 실시



구조용 드론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재정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.



늘어난 지방재원으로
지역경제 활력 제고
+3조 3,000억

- 지역 일자리 확충 (청년일자리 2.6만명 포함)
-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
  (예 : 화성 무인자동차시험장 구축)
- 소방공무원 3,700명 충원, '22년까지 2만명
  (소방안전교부세 +1,500억 추가 확충)

분권·균형발전으로
지역 여건에 맞는
발전전략 추진

-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
  (지방이양일괄법 제정)
- 자치경찰제 도입,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
- 고향사랑기부제 도입, 접경지역 新성장동력 발굴

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



600만 개의
건물·시설물 등에 대한
**점검이력관리·
점검실명제**

- 점검실명제와 이력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·점검에 대한 책임성 강화
- 시기별·유형별 취약건축물 점검으로 사전대비체계 구축
  (예 : 겨울철 화재대비 다중밀집시설 점검)
-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로 사고 재발방지

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혁신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

"실패박람회"를
정부 브랜드로 확산

-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실패를 사회가 안아주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
  - '19년에는 권역별 4회+종합 1회, 총 5회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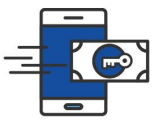


2030년 한국의
인구피라미드

국민 주도형
**사회문제
해결기반** 확대

- '온라인 광화문 1번가'에서 분산된 국민 참여 사이트를 통합 안내하고, 정책토론 활성화
- 주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·해결하는 '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' 추진

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, 작지만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.



전자증명서
열람·다운로드·전송

각종증명서 담는
"전자문서지갑"

- 「정부24」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,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공문서 발급·제출 가능
- 발급한 민원서류를 지갑에 보관, 종이문서 최소화
  (종이문서의 10%만 대체해도 연간 5천억원 절약)



행복카쉐어

저소득층 대상
"행복카쉐어"

-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대여·공유
  - PC·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예약 후 이용 가능